

개발도상국 지식기반 확산을 위한 한국 ODA와 대학의 파트너십

이 태 주 / 한성대학교 교수

I. 공적개발원조(ODA)와 대학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 혹은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에서 지식은 사회 발전과 진보의 원동력이 된다. 지식은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근간이며, 지식창출과 지식의 축적이 곧 발전이라고 간주되기도 한다(Tilak 2002). 지식 경영은 정부와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전략이 된지 오래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UNDP와 같은 국제개발, 금융기구들도 1990년대 말부터 지식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적자본과 상징자본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지식경영 방식을 적극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지식은 국제적 공공재이며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이기도 하다(Stiglitz 1999). 그러므로 국제개발원조는 지식축적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발 목적을 달성하고 지구적 공공재로서의 지식을 이

전하고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재로서의 대학과 교육체계 및 연구개발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요한 파트너들인 국내외의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을 통해 수행된다. 공적개발원조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국제개발원조라는 개념도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되는 국제사회의 원조로서, 이는 정부와 국제기구,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여타 제도와 관행들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이태주 2004:224). 즉, 공적개발원조는 국제개발을 위한 하나의 주요 수단으로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협력 관계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수준과 방식에 따라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가 평가된다.

한편, 대학은 핵심 국가자원인 지식과 인적자원의 산실이며, 미래 국가성장은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지식 창출과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류지성 2006). 지식창출과 인적자원 양성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경쟁력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대학은 자국의 발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ODA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의 하나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전문지식과 경험 및 기술과 자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동원되고 이전되는 지식체계와 개발경험 및 기술력은 공여국 정부, 공공부문과 대학 및 민간 기업에 의해서 축적되고 창출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지식의 보고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첨단 기술력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지원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자국의 미래 후속세대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고등학문의 주체이기 때문에 양질의 ODA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국의 미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중추 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 공여국들은 다각적인 방식으로 자국 및 개도국 파트너 대학과의 협력 관

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개도국에 제공된 ODA의 질적 수준은 공여국의 대학과 유관 연구소 및 전문 인력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은 ODA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 피드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도국 원조 경험이 아직 일천할 뿐 아니라 대학들도 아직 개도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도국 기술이전과 원조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ODA 사업에 대한 대학의 참여도는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ODA는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 및 전 지구적 연대를 통한 인간안보의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과 ODA는 공동의 이념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DA는 대학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개도국의 발전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원조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역으로 대학은 ODA를 통해 세계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의 후속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향후 바람직한 한국의 ODA와 대학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오랜 경험과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ODA와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방안은 무엇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진국 ODA 전문기관과 대학의 파트너십 사례

1. 영국

영국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제2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약 14억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 교육분야 지원에 배정하고 있다¹⁾. DFID는 향후 10년 동안 84억 파운드를 교육분야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개도국에 대한 교육 지원은 거의 초등교육과 여성교육 분야에 투여되는 것이지만 영국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속적 교육과 자질있는 교사 양성, 성평등과 여성 권한증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2차 교육과 직업전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개도국 중앙정부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개도국들이 향후 교육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DFID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도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분야 지원사업을 위해 DFID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12개의 교육과 연

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영국과 아프리카의 36개 고등교육,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교육, 보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06년도에만 1억 파운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통반자 관계(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가 아프리카 과학혁신 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진 실행계획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영국은 아프리카 개도국의 중점 연구소들과 대학들의 과학기술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²⁾.

한편, 영국 정부가 개도국의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서도 지속되고 있다. 대영 장학금과 각종 연구기금이 약 1,200만 파운드(2006-8) 배정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대영장학기금(Commonwealth Shared Scholarship Scheme)으로 2백만 파운드가 DFID를 통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DFID의 개도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규모의 장학과 교육사업은 영국 대학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영국이 개도국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매년 DFID 대영장학기금을 발표

1) HM Treasury and DFID(2006), Keeping Our Promises: Developing Education for All.

2) DFID(2006), The Importance of Secondary, Vocational and Higher Education to Development, A DFID Practice paper

하고 있는데, 이 장학제도에는 영국의 60여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대학들은 각각 1명에서 38명 정도의 개도국 유학생을 유치하여 석,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³⁾.

개도국 고등교육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지원은 약 300여개의 개도국 파트너 기관들을 통해 수행되는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00만 파운드를 빈곤퇴치와 과학기술 증진 연구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에 영국 정부는 이 계획을 상세히 발표한 바 있는데, 영국 DFID의 고등교육 개발 파트너십 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2006년 5월 영국 정부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개발 파트너십 계획’ (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 in Higher Education)을 발표하였다⁴⁾. 이것은 영국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5개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들에게 총 1,5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새로운 빈곤퇴치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DFID는 이 자금을 통해 향후 7년간 개도국과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개도국과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최소 2개 이상 공동 참여하게 되며 사업별 자금 지원규모는 15,000-50,000 파운드이다. DFID는 영국과 개도국 대학 간에 지식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빈곤을 경감시키며, 기초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

표(MDGs)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고등교육 개발 파트너십 계획은 해외 영국문화원과 영국대학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게 되는데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학들은 세계적인 빈곤퇴치를 위한 엔진실과 다름없다. 개도국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은 빈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영국 해외문화원장은 DFID를 대신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과 개도국 교육기관들은 환상적인 공동 연구를 착수하고 보건, 교육,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제도적 역량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확실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DFID는 지난 7월에도 향후 4년간 아프리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350만 파운드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고등교육 지원 자금은 아프리카 대학협의회(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를 통해 지원되며,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발전을 통해 빈곤퇴치 및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를 위한 제2차 교육개발연대(2006-2015)의 실행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국 국제개발부는 영국과 개도국의 대학과 교육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식과 기술이전 및 보건, 교육, 성평등, 환경 분야 등에서의 제도 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 노력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3) 캄브리지 대학(38명)이 가장 많으며, 대개 대학별로 4-6명씩을 유치하고 있음.

4) www.dfid.gov.uk/news (2006.5.16 press release)

DFID의 연구개발은 중점연구부(CRD, Central Research Department)에서 주관하는데, 이 부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인간개발, 성장과 생계, 사회, 정치, 환경변화, 커뮤니케이션과 ICT 등 4개의 연구개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DFID가 지원한 연구개발의 모든 성과는 R4D(Research4Development)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 R4D에는 1990년대 이후 수행된 6천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국별, 분야별 상세연구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며, 관련 파트너 연구단체와 기관, 연구성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⁵⁾.

뿐만 아니라 DFID에는 해외경제사회연구 자문위원회(ESC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Overseas)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총1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영국 주요 대학의 국제개발 관련 교수, DFID의 정책 자문관과 정책부서장, 개발NGO 대표들 중에서 박사급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해외연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개발전략과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와 심사, 활용을 위한 정책 자문을 청취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DFID는 개발과 관련한 주요이슈들의 연구를 위해 영국 대학의 주요 개발연구소들을 개발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기국가관리 프로그램>은 런던정경대학(LSE) 개발연구소(DSI)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붕괴와 실패, 전쟁과 복구 및 재건계획, 중장기적 국제사회의 개입과 그 영향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국가 센터>는 쉐섹스 대학 개발연구소(IDS)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MDGs 달성 계획 연구와 개도국 젊은 연구자 지원 및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연구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DFID와 쉐섹스 대학 개발연구소는 <시민권, 참여, 투명성 연구센터>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민권 증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과는 <불평등과 민족성 및 인간안보 연구 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종족과 민족, 불평등과 갈등에 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다민족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장기적인 심층연구와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연구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소수민족과 원주민 문제 및 문화적 갈등의 이슈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DFID의 2005-2007 연구지원 계획⁶⁾에 따르면 MDGs 달성을 위해 새로운 과학과 혁신적 사고가 필수적이며,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연구 자금 지원

5) www.research4development.info

6) DFID, Research Funding Framework 2005-2007

수준은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DFID는 2006년 현재 약 1억 파운드의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질병퇴치, 국정능력을 결여한 최빈국가, 기후변화와 같은 4개의 주요 연구영역에 2/3의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3은 빈곤퇴치, 교육, 성평등, 유아사망, 질병, 환경 등과 같은 MDGs 목표 달성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DFID는 특히 개도국의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 역량 구축과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개발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과 같은 자금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DFID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다⁷⁾.

한편, DFID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기관들과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본협정을 체결한 많은 사업 수행기관들 중 다수는 영국의 주요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에딘버러 대학 응용언어연구소(언어연수), 버밍엄 대학(제도개발 연수), 월버햄턴 대학 국제개발센터(DFID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이클 훈련), 런던대학(농업계획과 도시개발 자문), 그린위치 대학(토지관리 프로젝트 자문), 월버햄턴 대학 국제개발센터(개발지도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존스홉킨스 볼룸버그 공공보건대학원(개발지도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쉐섹스 대학 개발연구소(태도와 의견 조사), 버밍엄 대학(거

지 원 분 야	주요 연구 프로젝트	내 용
농 촌 개 발	CGIAR(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15개 국제농업연구센터(13개 개도 국 센터)지원, 총 2.2억 파운드
	재생활경자원 연구	11년간 재생환경 연구지원
	정책연구 프로그램	단기, 중기 농촌생계 연구
보 건	공-사 파트너십	신 보건의료 기술연구를 위한 비영 리 연구 사업(말라리아, 백신, 에이즈 연구 등)
	국제 공동협력	모성사망, 국제 이질연구소 등 지원
	보건 지식 프로그램	특수 질병에 대한 15개 연구지원으로 개도국 파트너와 공동 수행
	의료연구협의회	특수 질병 연구 지원
사 회 과 학	개발연구센터	5년간 8개의 연구센터 정책연구 컨 소사업 지원
	국제 공동협력	세계은행과 UN 연구지원
	DFID 응답 프로그램	10만-30만 파운드 규모의 소규모 단독연구 지원
공 학	공학지식 연구 프로그램	총 187개 공학분야에서 6개 포트폴 리오 지원
교 육	DFID 프로그램	5만-30만 파운드 규모의 50여개 개 도국 교육 정책 연구

7) DFID, 위 자료.

버넌스와 사회개발자원센터) 등은 각각 DFID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문가 훈련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DFID는 개발 인지제고 기금(Development Awareness Fund)을 운영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작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개발인지 기금의 주요 수혜자 역시 대학들이다. 2005-2006년도의 개발인지 기금 수혜자를 살펴보면, 세인트마리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30만 파운드), 노스옵브리아 대학의 개발연구학위과정(4.7만 파운드), 글래스고우 대학의 개발교육과 전문교사교육(20만 파운드), 개방대학의 글로벌 교육(5만 파운드), 과학교육협회의 교육 프로그램(27만 파운드) 등이 대학 개발교육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정부와 DFID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들을 통한 개발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도국 유학생들을 대규모로 초청하여 자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학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대학간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지식과 자금을 결합하여 개발원조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발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효과적인

ODA의 수단이고 엔진이며 동반자이기도 하다.

2. 미국

미국 국제개발청(USAID)과 미 대학 간의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공동 협력 관계는 195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세기부터 1940년대까지도 이미 많은 미국 대학들에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 정치가, 고위관료 및 유학생들이 원조자금을 통해 각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였다.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우리의 과학적 진보와 산업 발전의 혜택을 저개발국가의 성장과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창함으로써 미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본격화되었다. 이때 이미 미국의 주립대학 위원회들은 미국의 농업개발 분야를 대외원조의 중점 분야로 제시하였고, 미 의회는 1950년에 소위 포인트 포(Point Four) 계획을 발표하여 기술협력청(TCA)을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국제원조를 본격화하였다. 1950년대에 미국은 이미 26개의 미국 대학과 개도국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61년에 미 의회는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공포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은 이전의 미국 대학과 개도국간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점차 제도적 역량 구축(institution building)을 위한 개도국

유학생의 대규모 미 대학 유학 프로그램 도입과 미국 대학들에 개도국의 여러 전문기관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교육,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1966년에 미 의회는 대의원조법 211(d) 조항에 근거해 1천만 달러를 개도국 교육기관 역량 강화와 연구를 위해 배정하였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대의원조는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들의 제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원조 정책은 1973년에 미 의회가 대의원조법을 수정하고 ‘최빈국의 최빈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대학들의 역할은 이전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그래서 1975년까지 대의원조 자금을 받는 미국의 대학들은 50% 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1975년에 미 의회는 “기근 예방과 기아로부터의 자유”라는 표제의 대의원조법 부속문건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식량과 농업 분야에서 미 대학과 USAID간의 공식적 파트너십 관계가 재설정되기도 하였다. 1990년에 USAID는 조직개편을 통해 ‘개발에 있어서 대학 협력 센터’(Center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Development)를 창립함으로써 이후 대의원조에 있어서 미국 대학의 역할과 공동 협력관계는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미국 대학과 USAID 간의 협력관계는 몇 가지 방식과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USAID는 미국의 3,500여개의 미국 기업들과 300여개의 자원봉사기구(PVO) 및 200여개의 대학들이 공개경쟁에 의해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의 디자인, 사업수행과 관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대학과 USAID의 공식적 관계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위탁계약(contract) 방식, 무상증여(grant) 방식, 협력협정(cooperative agreement) 방식이 그것이다. USAID가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의 3/4은 위탁계약 방식이다. 이것은 USAID가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대학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4이 대학에 대한 증여와 공동협력 협정에 의한 사업방식이다. 후자의 두 가지 방식은 대학에 상당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대학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의원조 정책도 개발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develo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식기반 원조정책과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KM)에 기초한 원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USAID와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모두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을 주요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USAID에는 고등교육 및 인력개발부에 고등교육기관 연락관을 두고 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은 국제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정책적, 지식자원이 되고 있다. 경제개발과 농업, 보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분야 등에서 대학 및

연구소들은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세계 각 지역의 국제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디자인, 사후관리와 평가 등 특정 프로젝트 사이클을 담당하기도 한다. 매년 USAID는 파트너십 기관 공모를 통해 주요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들과의 파트너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며, 장학금과 인턴십 공모를 통해 국제개발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기도 한다.

한편, 미 국가과학아카데미(NAS)와 국가연구위원회(NRC)는 USAID의 지원으로 미-이스라엘 협력 개발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협력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금들은 대개 20만불 정도 규모로서 국제개발과 관련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도부터 USAID는 교육협력계획(Education Partnership Program)을 착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40개 주에서 총 200여개의 미국 대학들과 160여개 개도국 교육기관들과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8개 개도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인력훈련기관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및 교수연수, 고등교육 기관의 행정과 인력 개선, 자연자원 관리와 농업 생산력 증대, 노동인력과 직능 개발과 생산성 증대, 교육 개선과 민주화 촉진, 보건 및 영양 개선과 에이즈

퇴치,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선 등의 영역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교육파트너십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USAID는 미국을 대표하는 6개의 고등교육협의체⁸⁾(4,070개 교육기관 포함)와 공동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2년에 설치된 개발에 있어서 대학 협력을 위한 협의체 연락관 사무소가 이 공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140여개의 협력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회원기관들에게는 최대 US\$ 125,000까지 지원되는 교육,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교육 협력 프로그램은 특정 개도국에 대한 훈련(T), 인턴십(I), 교류(E), 장학금(S) 지원을 포함하는 TIES 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미국의 USAID와 고등교육기관들은 개발을 위한 공동의 전략적 관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동 관심영역은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 관리체계의 개혁과 개선
- 노동력 개발 체계 개선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
- 자연자원보호와 농업생산력 증대
- 인간과 제도역량 구축
- 교사양성 대학의 질 개선
- 민간부문 개발
- 공공행정과 관리에서의 고등교육 역할 증대

이러한 교육협력 이외에도 USAID는 매년 수 천 명

8)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AACC)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ASCU)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Th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NAICU)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Land-Grant Colleges (NASULGC)

의 개도국 정부 관료와 과학 기술인력,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장, 단기 참여 연수(participant train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참여연수 프로그램은 단기과정에서부터 학위 과정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의 장소는 가장 효율적이고, 연수 성과가 높으며, 비용 효과가 있는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USAID와 대학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힘은 결국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과 지식산업에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는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원조이며, 대학과 고등교육기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여 지식을 동원하고 활용하였다. 미국에서 원조산업은 곧 지식산업이고, 대학과 원조기관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지식에 기반에 정부와 대학의 세계화 전략 때문이다.

3. 캐나다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역시 개발협력 대학 파트너십(University Partnerships in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PC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대학을 통해 개발도상국 대학과 훈련기관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2004년도에 국제개발부 장관은 약 1,280만 달러의 자금을 향후 6년간 13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

대학과 개도국 대학에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매년 공모되는 UPCD 프로그램은 공개경쟁과 독립적 선정절차에 의해 최종 지원사업이 선별되는데, 캐나다 대학협의회가 이 선정과정을 CIDA와 공동 주관한다.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는 1970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 법인으로 개도국에 과학 기술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DRC는 지식을 통한 역량강화(empowerment through knowledge)를 기본 목표로 정하여 개도국의 과학 기술 연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도국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공동연구와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로 환경과 자연자원 관리,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혁신, 정책과 과학, 사회 경제 정책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개도국의 미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와 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IDRC는 캐나다와 개도국 연구자들 간에 과학과 학문, 개발 분야에서의 지식공유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IDRC는 다른 선진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식과 과학기술의 이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기도 하다. IDRC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총 6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 세네갈, 이집트, 아시아의 인도와 싱가포르, 남미의 우루과이에 IDRC 지

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IDRC는 연방정부, 특히 외무성과 CIDA와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1억 2,500만불(2004/5년도) 정도이다.

4. 호주

호주의 AusAID 역시 다양한 개도국 유학생 초청 장학사업을 통해 호주 대학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AusAID에는 호주 리더십 장학금, 호주 개발 장학금, 교육과학훈련부(DEST) 장학금, 태평양도서국을 위한 거버넌스 장학금, 호주 지역 개발 장학금, 호주 파트너십 장학금, 카네기 멜론-AusAID 장학금 제도 등이 있다. 이들 장학제도들은 대개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호주와 개도국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개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연구개발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 호주 정부는 2006/7년부터 2010/11년까지 5년 동안 총 19,000여명의 미래 연구자와 지도자들에게 14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의 수혜자들은 장기간 호주에서의 연구와 학위취득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서 유력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들은 동창회 네트워크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강력한 인적 연대를 구축하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아태지역 교육부 장관 회의를 격년마다 개최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교육개발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논의하고 이 지역에서의 교육과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AusAID는 호주와 해외에서의 개발연구를 지원하고자 대학과 연구소들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usAID는 주요 연구 분야별로 중점 연구소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의 전문성을 확충하여 아태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이슈에 대처하고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궁극적으로 ODA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며, 국제개발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하며, AusAID 직원들에게 개발이슈에 대한 학제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은 아태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다부문 접근방법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정책 협의의 기회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AusAID는 개발연구 프로그램(ADRP)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들과의 다년간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연차별 연구와 이와 관련한 실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⁹⁾.

9) AusAID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개발연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sia-Pacific Economic Literature 발간 지원(ANU), ADB의 Asia Recovery Information Center 지원, ANU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지원, 민주제도센터(CDI) 지원, 개발연구 네트워크 지원,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지원, ANU의 Pacific Economic Bulletin 발간 지원, Pacific Islands and PNG Updates 발간 지원, 지역 경제정책기구(REPSF) 지원, 멜라네시아 국가, 사회, 거버넌스 프로젝트 지원,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지원 등이다.

이상과 같이 호주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로 다양한 장학금 제
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AusAID와 ANU와 같은
주요 대학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각 분야에서 지
속되고 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개도국이
개발이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인적자원 개발 지원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러
한 관점에서 호주의 원조정책은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연구개발 및 교육협력을 통해 효과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ODA와 대학의 참여 현황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사업과 ODA 자금은 대
학과 거의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일
본의 JICA를 모델로 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모든 개발사업의 추진방식과 사업유형 및 조직형
태도 JICA 방식을 그대로 복사한 바 있다. 2006년
KOICA의 프로그램 방식 사업조직으로의 개편 이
전 주요 사업형태는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전
문가 파견, 프로젝트 사업, 개발조사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연수생 초청 사업도 거의 2주 내외의 단
기 방한연수 방식이 거의 지배적이었다. KOICA

창립 당시부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던
개도국 유학생 초청사업은 부처간 이해관계로
KOICA에 이관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선진국에
서와 같은 장학사업과 개발연구 지원사업, 유학생
초청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은 착수되지 못하였다.
2005-6년 현재 KOICA와 대학과의 협력사업은
봉사단 파견을 위한 대학과의 산학협력, 일부 프로
젝트사업 위탁 수행, 전문가 파견과 연간 90여명
정도의 장기(12-14개월) 학위과정 초청연수를 포
함한 연수생초청사업에 총 1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¹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지식기반 원조정
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식창출의 보고인 대학과 원조기관
간에는 특별한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
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질적으로 더욱 우수해
지고 국제적으로 독특하며, 한국의 개발경험을 세
계화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관련한 지식체계를 집대성해야 하며, 대학 및 연구
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원조정책 수립과 포괄적이고 전략
적인 원조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
한 지역지식과 현지 사정에 맞는 적정 기술 및 수
용가능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식체계가 무엇인가
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10) 일본 JICA의 경우 장학사업은 1) 장기연수 2)인적자원개발 장학사업 3) 해외 일본인 학생 초청으로 구분되는데 2006년 현재 장기연수는 209명, 인적자
원개발 장학사업은 468명, 해외 일본인 학생초청이 28명이다. 이들 연수과정에 전국적으로 22개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표 8〉 〈2006년도 KOICA와 대학의 협력사업 현황〉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참여 대학
단기 연수과정 위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차세대 지도자 연수 라오스 채소작물 재배 원예재배기술 스리랑카 경제개발 전략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사 능력배양 국제통상과 WTO 몽골 전자정부 이라크 전자정부 재난방지 이라크 원예산업개발 베트남 직훈교사 능력배양 이라크 직훈교사 훈련 중소기업 e 비즈니스 과테말라 직훈 운영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개발 이디오피아 섬유산업개발 인도네시아 국제통상 및 WTO 도하개발아젠다와 WTO 협상 알제리 공무원 연수	강원대 경북대 경북대 경희대 경희대, 아주대 고려대 고려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중앙소방학교 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KDI국제정책대학원 KDI국제정책대학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학위과정(1년) 위탁	한국경제 연구 국제통상 및 경영 이라크 여성개발 공공정책 이라크 학위과정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아주대 국제대학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KDI국제정책대학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봉사단파견 산학협력	팀제 봉사단 파견	한경대, 경북대, 부경대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모로코 자동차 정비 직훈 섬유기술 훈련원 자프나 기능대학 개선 국립소아병원 현대화	한국기술교육대학 기능대학 기능대학 한양대 병원
전문가 파견사업	전문가 40명 중 8명이 대학교 수임(2005년도)	한국산업기술대 등

IV. 개도국 지역지식 기반확산을 위한 ODA와 대학의 협력방안

선진국들의 과거 원조 경험을 통해 도출된 여러 결론 가운데 공통적인 교훈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못지않게 지식과 아이디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즉, 경제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자본 격차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 격차이며, 정책과 제도 격차이기도 하다(World Bank 1998). 이 점을 고려할 때 국제개

발협력에서 개도국에 대한 자본과 기술 이전 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교류와 이전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원조기관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 및 이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원조산업은 곧 개도국에 대한 포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산업인 것이다. 이 점에서 지식산업의 근간으로서 대학은 원조기관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며 개발에 대한 지식창출과 지식이전을 통해 대학은 국제사회의 공공선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개발원조는 지식에 기반한 원조(knowledge-based aid)이어야 한다. 지식기반 원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히 중요하다. 원조기구를 위해서도, 개도국을 위해서도 지식기반 원조는 매우 중요하다(Tilak 2002). 우선 원조기구들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개발환경을 이해하고 선진국의 축적된 개발지식을 통해 지식기반 원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식에 기반한 원조가 더 질적으로 우수하며 효율적이고 성과가 높은 원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 공여국들의 공통 경험이다. 세계의 원조기구들은 지식수준에서 편차가 큰데, 원조기구와 조직들의 지식격차는 곧 원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원조기구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서 끊임없이 개발원조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통해 원조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개발지식과 교훈을 축적한다면 그 조직은 지식에 기반한 원조를 수

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그러나 실패에도 둔감하고 학습하려고 하지 않으며, 반(反) 학습 조직문화가 만연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역지식도 전문 분야별 연구개발 지식자원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지식이 없는 단순 원조배달서비스(aid delivery service) 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한 원조기구들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파트너십 체계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일관성 있는 원조정책이나 효과적인 원조 프로그램의 수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기반 원조와 원조기구의 학습조직화 및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지식기반 원조정책은 개도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개도국이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원조는 선진국과 국제개발 체제가 축적한 개발지식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것을 적극 도와야 한다. 흔히 공여국 전문가들은 흔히 개도국이 개발지식이 전무하다거나 개도국의 지식체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특수한 환경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적 삶의 방식들을 통해 축적한 토착지식체계(indigenous knowledge system)를 갖고 있다. 개발지식은 이러한 토착지식체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것이며, 개발원조는 선진국의 지식체계를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도국이 오랜 동안 유지하여 왔던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을 재발견하도록 하고, 서구의 근대적

지식체계 및 첨단 개발지식과 전통적 지역지식을 결합하여 자율적으로 개발의 길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지식기반 원조는 개도국이 다양한 지식체계의 축적과 종합을 통해 현지 사정에 맞는 적정 수준의 기술과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기술 및 지식체계를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체계의 종합과 재편, 지식창출 작업은 개도국의 대학과 고등연구소들과의 공동연구와 지식기반 사회로의 제도적 역량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달성된다. 개도국의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격차와 정보격차 해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 지식은 인류가 직면한 빈곤퇴치와 질병예방, 인간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이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이다. 국제개발 원조는 그러한 지구적 공공재를 확대하는 것이며, 국가 연구소와 대학은 지구적 공공재를 통해 개도국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적 공공재로서의 대학과 연구소들의 연구 자금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Sachs, 2005)¹¹⁾.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ODA 성과를 제고하고 아울러 국제개발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대학 교육 및 연구수준의 세

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원원 전략으로서의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지식기반의 ODA 정책 추진을 위해 ODA 자금 중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은 개발정책과 전략 연구 뿐 아니라 개도국 지역 연구와 보건, 환경, 여성, ICT, 농업기술 등 개발사업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주요 중점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도국 지역연구와 MDGs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연구, 특히 개도국 대학 및 연구소와 공여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교부나 재정부 및 KOICA와 수출입은행의 ODA 자금 중에서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나마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심층연구는 전무하며 수개월 동안 작성된 급조된 보고서 수준의 정책연구 수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조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기반 개발원조를 추진할 수 없다. 지식기반 원조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개발 예산(총 ODA의 10% 내외)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개발관련 대학, 연구소 등 Think Tank 기관을 집중 육성하고, 한국의 개발경험과 개발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와 병원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의 교육

11) 예를들면, 열대지역 개도국들의 농업연구소 네트워크인 국제농업연구 자문그룹(CGIAR)에 대한 연구 지원은 총 4억불인데 이는 세계의 6대 농생명기술 회사의 예산보다도 적다. 전 세계의 질병 중 90%의 질병 부담을 차지하는 열대병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전 세계의 R&D 지출의 10%에 불과하다(Sachs 2005).

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연구와 신기술 및 지식이전은 개발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둘째, 가칭 ‘한국국제개발연구센터’ (KCID,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같은 응용연구센터를 KOICA에 설치하여 한국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지식체계화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피드백 연구를 전담하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국제개발연구 네트워크 등과의 공동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편제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전략과 국별, 분야별 프로그램에 입각한 효율적인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전문 연구센터 기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DAC 가입 준비 등 현실적인 연구과제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지식 축적을 위해서 연구센터 기능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외교부 중심으로 통합된 선진국 원조기구들은 제한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서 점차 다양한 분야의 개발 전문가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발지식과 경험 및 특정 국가의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지역지식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OECD 2005). 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 필요한 지식체계는 개도국 주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된 지역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개도국의 정부개혁과 법체계 등에 대한 전문 지식도 포함된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원조 실시를 위한 각 분야별 개발지식과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 등에 대한 심층 지식도 필요로 한다. 이처럼 고도

로 분화되고, 학제적이며, 응용 가능한 개발지식을 축적하고 창출하여 국제개발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개발경험을 세계적 지식체계로 응용할 수 있는 국제개발연구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교육부와 과기부 등에서 지금까지도 분산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유학생 초청사업을 외교부(KOICA)를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개도국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장기 유학생초청사업과 장학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선진 공여국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단기 기술연수보다는 장기 학위과정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개발목표 달성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 동안 KOICA를 통해 실시해 왔던 단기 초청연수사업은 상대적으로 점차 축소하고 장기 연수와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도국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대한 장학사업과 유학생 초청지원 확대는 ODA 자금의 국내 환류 비율을 높힐 뿐 아니라 국내 대학들의 국제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학의 책임과 역할을 증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이들의 개발지식과 지역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개도국에 장기간 파견

되어 활동하고 귀국하는 매년 800여명의 해외봉사단원들에 대한 사후지원과 인력활용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같이 귀국단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들은 지역전문가 혹은 국제개발 전문가로서 경력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도국에 대한 경험과 응용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도 도입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학들은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을 통해 인류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ODA 자금을 활용한 각종 연구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들은 교과과정에 국제개발 및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한 커리큘럼

을 확충하여 청년들이 지구적 이슈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국제대학원들은 재정적,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세계 각 지역의 지역지식과 서구지식을 접목하여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국제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개발 학위과정을 적극 도입하고 ODA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지식기반 원조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ODA와 대학의 파트너십은 확대될수록 바람직하며, 지식을 통한 개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ODA 자금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초창기 한국 ODA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지식창출 전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참고 문헌]

- 류지성 외. 2006. 「대학혁신과 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태주 2004. 「국제개발의 인류학적 연구와 평가 및 정책참여」, 『비교문화』 10(1):221-48.
-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2006, The Importance of Secondary, Vocational and Higher Education to Development, A DFID Practice paper.
- DFID, 2005. Research Funding Framework 2005-2007.
- HM Treasury and DFID 2006, Keeping Our Promises: Developing Education for All.
- OECD 2005.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OECD Publications.
- Potter, R.B., 2001. "Progress, Development and Change",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Vol. 1 Issue 1, p01-04.
- Sachs, Jeffrey 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to the UN Secretary-General. London.
- Sawamura, Nobuhide. 2002. "Local Spirit, Global Knowledge: a Japanese approach to knowledg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32 Issue 3, pp339-348.
- Stiglitz J. E. 1999. "Knowledge as a Global Public Goods", in Kaul Grunberg & Stern eds.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 UNDP, New York. pp.308-25.
- Theien, Jean-Philippe, 2000. "Development Assistance on the Brink", Third World Quarterly, Vol. 21 Issue 1, p21-38.
- Tilak, Jandhyala B. G.. 2002. "Knowledge Society, Education and Aid",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32 Issue 3, pp 297-310.
-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New Opportunities for US Universities in Development Assistance, Washington DC.
- World Bank 1998. Assessing Aid, Oxford University Press.